

수탁자 못찾고 운영 포기 논의도...광주시립요양병원 ‘빨간불’

제1요양병원, 오늘 이사회 열어 운영 포기 논의
 제2요양병원, 위탁 운영자 선정 불발 대책 시급

광주시립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낮은 의료 수가와 높은 운영비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병원들의 운영 전망에 적신호가 켜졌다.

제2요양병원 운영을 도맡을 위수탁자 모집이 불발되는가 하면 제1요양병원 위수탁 의료재단이 병원 운영 포기 논의에 나서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다.

5일 광주시와 시립요양병원 등에 따르면 제1요양병원 위수탁을 맡고있는 빛고을의료재단은 오는 6일 이사회를 통해 병원 위수탁 운영 포기 안건을 논의한다.

요양병원 위수탁기관 운영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가 개정돼 보조금 지원 길이 열렸지만 적극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병원 운영 비용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두고 벌어진 노조와의 갈등이 봉합되

지 않은 점도 논의의 배경에 깔렸다.

재단은 지난 2월 직전 운영 재단으로부터 병원 운영을 인수인계받은 뒤 현재까지 보건국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와 인건비·고용승계 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재단은 수익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줄이는 취지에서 임금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노조는 개편 이후 임금이 기존 대비 일정 부분 깎이는 점에 반발, 직전 운영 재단과 맺은 임단협 내용 승계를 촉구했으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84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에 광주시와 시의회는 병원 운영 비용 보전에서 비롯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자 보전 방안 마련을 약속하고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최근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8조에 운영지원안이 신설, 시장의 재량에 따라 시는 병원 운영

수탁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병원은 해당 조문 내용 중 ‘일부 지원’을 문제삼아 현 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조례인 ‘광주시 호남권역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광주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비교해 보다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재단은 지난 2월 병원을 위탁 받은 후 현재까지 9개월 동안 30억여 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나 시의 미흡한 공익적 적자 지원책으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며 “30억원은 의료장비 인수자금과 운영자금, 직원 인건비에 쓰였다. 거의 고갈된 상황에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지출이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의 공익적 적자의 합리적인 정의와 적용 지원책이 없는 한 이달부터는 임금체불도 예상된다”고 하소연했다.

제2요양병원은 민간위탁 운영자를 찾지 못



광주 시립제1요양정신병원(사진 좌측)과 시립제2요양병원.

해 향후 운영 전망이 불투명하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제2요양병원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했으나 한 건의 신청자도 없었다.

당초 전남대병원이 개원과 동시에 운영을 도맡아 왔으나 최근 ‘낮은 의료수가·높은 운영비 등 요양병원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에 밝혀왔다.

전남대병원은 시의 요청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제2요양병원 연장운영을 도맡기로 했지만 해당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는 운영 여부를

가능할 수 없다.

시 직영 방침을 세우더라도 관련 재단 설립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는 탓에 당장 직영에 나서는데도 무리다.

시 관계자는 “제1요양병원 지원의 경우 내년도 일반예산 편성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다양한 규모로 지원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2요양병원 또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면기자

2023. 11.17.(금) ~ 19.(일) (3일간)
삼향읍 남약중앙공원 일원

무안군



3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동 독립로에 위치한 플라타너스 가로수에 교통 표지판이 가려져 있다.

“표지판 안 보여요” 가로수에 가려진 교통 안전

남구 독립로 40년 넘은 플라타너스 282주 “가지치기 고려” 운전자 시야 확보 목소리

“속도 표시가 잘 안보여요.”
 광주 남구 대형 가로수에 교통 안내판이 가리면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3일 오후 광주 남구 백운동 독립로 왕복 6차선 도로 양 옆엔 길이가 10m가 넘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282그루가 자리했다.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지만 속도제한·지도 안내판이 큼지막한 앞에 가려져 있었다.

더욱이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30’ 표지판은 무성한 잎으로 식별조차 어려웠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던 한 운전자는 20m밖에서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던 과속 단속 카메라가 5m를 두고 눈앞에 나타나자, 급정거를 했다.

시민들은 혼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독립로로 직장을 오가는 이모(28)씨는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주행하긴 하지만 도로 표지판이 안 보여 멈

거나 당황한 적이 있다”며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구 주민 남모(52·여)씨는 “가로수가 앞으로 더 자랄 것인데, 표지판 높이·길이 조정이나 가지 제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 표지판 신호등 등 도로 안전 시설을 가리는 지역에 가로수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에 심긴 이 가로수들은 거대해 이식이 어렵고 도심 녹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쉽게 제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겨울철 가로수 가지를 잘라 시야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허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5일 “교통 표지판이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면 운전자의 교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여러 기관의 논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변용일기자

장성군, 전남 최초 ‘대학생 전 학기 등록금’ 지원

장성군이 전남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학기 당 200만원씩 최대 8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한중 장성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재원은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국가·학교·기관·단체 또는 보호자 직장에서 지원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 부담

분을 학기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30세 이하 대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 이상 학점 취득’, ‘보호자가 공고일인 11월1일 기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2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록금은 오는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장성=김수권기자